

# ‘화재 사망자 없는 설 연휴를’...소방 특별경계근무

### 5년간 설 연휴 화재 日평균 143.5건...평시比 25% ↑

### 화재취약시설 불시 단속...위법 시 사용 중지 명령

### 소방청 “코로나19에 주택 머무는 시간 많아 더 주의”

화기 사용이 증가하는 설 연휴 기간 화재가 평상시보다 25% 가량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가족 간 주택이나 소규모 숙박시설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설 연휴에 발생한 화재는 총 2871건에 달한다. 이 화재로 148명(사망 35명·부상 113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43억2000만원의 재산 피해도 났다.

설 연휴 하루 평균으로 따져보면 143.5건의 화재로 사상자 7.4명(사망 1.8명·부상 5.6명)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체 화재 하루 평균발생 건수인 114.4건에 비해 25.4% 많다.

화재 발생 장소는 ‘비주거시설’(30.9%·888건)과 ‘주거시설’(29.9%·858건)이 많았다. 10건 중 6건꼴이다. 뒤이어 임야 12.5%(360건), 차량 6.5%(186건), 철도·선박·항공기 0.2%(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많았다. 최근 5년간 전체 주거시설 화재 사망자 비율 57.2%(954명)보다 25.7%포인트 높은 82.9%(29명)였다.

화재 원인으로서는 ‘부주의’(59.4%·1706건)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전기적 요인’(18.4%·528건), ‘원인 미상’(8.9%·256건), ‘기계적 요인’(8.0%·230건), ‘방화 또는 방화의 심’(2.1%·59건), ‘화학적 요인’(1.2%·34건), ‘교통사고’(0.9%·25건) 등의 순이다.

화재 발생 시간은 활동이 많은 ‘오후 1~3시’(17.0%·487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오후 3~5시’(13.1%·375건), ‘오전 11시~오후 1시’(12.5%·358건), ‘오후 5~7시’(10.1%·290건), ‘오후 7~9시’(9.0%·257건) 등의 순이었다.

화재 사망자는 주거시설(82.9%)에서 오후 3~5시(22.9%) 사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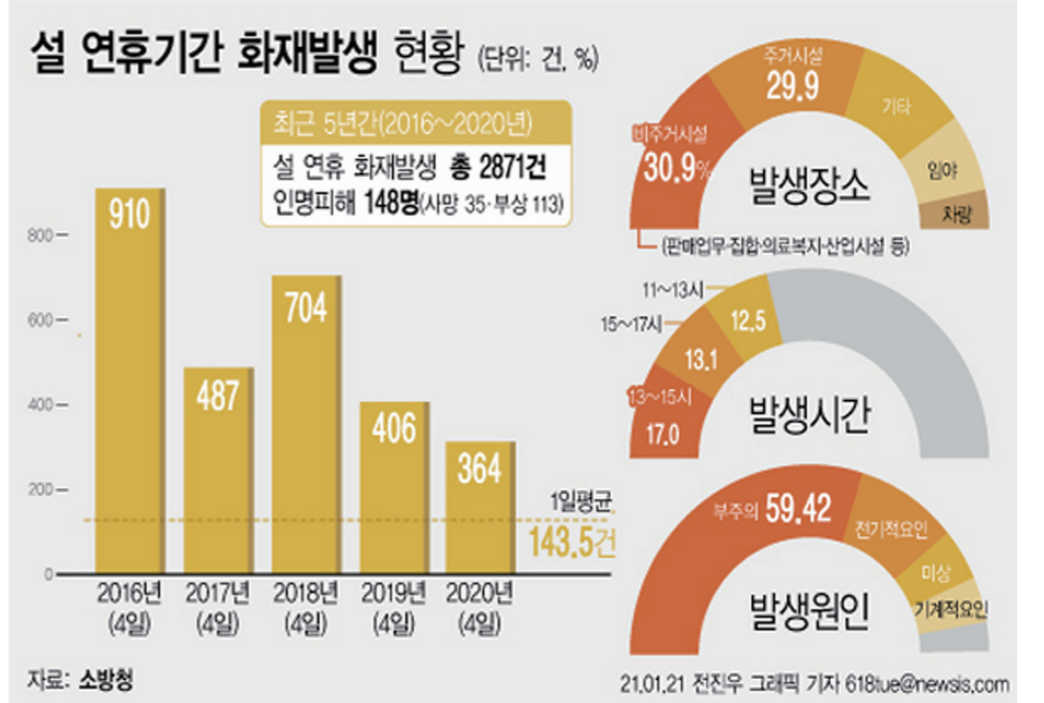
이에 소방청은 설 연휴 기간 ‘화재 사망자 제로(0)화’를 목표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다음달 5일까지 인과가 몰려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훼손과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차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다.

쪽방촌 등 안전 취약계층이 머무는 시설을 찾아 화재위험요인도 점검한다.

앞서 지난 7일부터는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다음달 10~15일 연세 간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간다. 주요 화재취약시설에 소방대원과 소방차량을 전진 배치한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연휴 기간 가족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리를 비운 채 음식물 조리하지 않는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에 각별히 신경써달라”며 “고향 집에는 화재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선욱기자

## 전남 농관원 ‘설 제수용품 부정유통 집중단속’...특사경 투입

###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 농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미표시 등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전남 농관원은 2월 10일까지 설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과일류, 나물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류, 제수·선물용품 통신판매업체, 농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이다.

값싼 외국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와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또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심업체를 조사한다.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1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30명이 대거 투입되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지능적인 위반 업체는 쇠고기 유전자 판별법과 돼지고기 이화학적 판별법,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해 부정유통을 단속한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 하겠다”며 “소비자들은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 여직원들 성추행 공기업 간부, 2심 해임 정당

### “비위 중하고 높은 청렴성 요구...사회 통념상 타당한 처분”

여직원들에게 성추행·성희롱 행위를 반복한 공기업 간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현중)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모 공기업(전남 나주 위치)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공기업 직원에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징계 양형 기준으로 미뤄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공기업은 내부 고발자 익명 신고 시스템에 A씨의 성추행·성희롱에 대한 고충 신고가 접수되자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2018년 5월 A씨를 해임했다.

회사 회식 자리 또는 이어진 술자리에서 간부인 A씨가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여직원들의 고충이 신고의 주된 골자였다.

한 여직원은 회식 다음 날 출근해 상사인 A씨에게 전날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는 한편 불쾌했이라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는데 이후 업무 처리에 관한 간섭·인신공격·각종 음해 등 A씨의 보복성 행동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직원은 A씨로부터 ‘탁자에 올라가니 예쁜 다리가 안 보이네, 뒷모습 봤는데

칭찬하진 않아요 왜 안 물어’ ‘집에 찾아가 밥을 먹겠다거나 청소를 해주겠다’ 등의 성희롱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 근무지 이탈과 출장비 부당(허위) 수령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A씨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 소명 기회를 차단하는 등 방어권을 침해했다. 해임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임에 관한 회사의 징계 절차 과정에 어떠한 하자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성희롱 고충 신고서를 통해 제출한 내용은 A씨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장소·내용과 방법·느낀 감정과 대응 방법 등 주요 부분에 관해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1심은 “A씨는 부서 내 모범을 보여야 할 직책에 있었다. 직무상 직위를 이용, 회식 자리에서 다수의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적 언행을 동반한 성추행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기업인 회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게 준하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민정기자

### 광주FC 서포터즈 “사무국 비위 당사자 사퇴·엄벌해야” 탄원

프로축구 광주FC가 구단 내부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서포터즈까지 나서 비위 당사자들에 대해 엄벌과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광주FC지지자연합회 ‘빛고을’은 구단 A 사무국장과 B선수운영팀장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광주지검에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해 8월 사무국의 불법운영수당에 대한 의혹이 터진 후 혐의자는 검찰 기소가 됐으며 혁신을 위해 신입 대표이사도 선임돼 정상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혁신을 위해 가장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할 혐의자들은 아직도 구단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으며 혁신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입 대표는 취임한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아 사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주인인 광주FC가 하루 빨리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혐의자들이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